

# 地方自治時代 地方政府的 役割과 地域經濟의 發展方向

崔 瑾 熙

〈서울市立大 教授, 都市 및 地域計劃學博士〉

## 1. 서 론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變化 즉 世界化, 情報化, 그리고 地方化, 그리고 地方化에 관련된 구호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여러 방면에서 이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地方自治의 전면적인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내손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일꾼을 뽑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주민들의 기대에 현실감있게 부응할 수 있는 것은 地方政府가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관선자치단체장 시대보다는 훨씬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여건을 개선해 주며 과거처럼 中央政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주도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해야 한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排戰이이기도 하

지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며, 이러한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부문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정부부문은 역시 보수적이지만 현재 벌어지는 변화에 대하여 우리보다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즉 정부의 再創造(Government Re-inventing)라는 기치하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改編(Government Restructuring)하는 등의 발빠른 변화를 통하여 치열한 국내외의 無限競爭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지방정부도 과거의 권위주의의 의식에서 탈피하고 조직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하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기업들을 규제하기보다 공동운명체로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자세로 우수기업을 지원하거나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活性化하여야 한다.

변화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역은 보다 큰 발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잘 이용하여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에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 2. 地方自治時代 정부의 役割

지방자치의 성공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獨立性과 自主性을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를 받아 집행하는 등의 수동적인 집행기관의 역할을 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행정이 가능해졌다. 각 지방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역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의 자주권도 필요하지만, 財政權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독립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림을 중앙정부의 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자치권이 있다고 해도 지방정부의 自律性과 獨立性도 제약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치의 성공적인 정착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방정부가 주어진 자치권한을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생산의 확대와 일자리 마련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稅源과 稅收入의 증가를 가져다 주므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가능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쏟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대로 어느 지역, 어느 도시나 똑같은 세목과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지역정부 차원의 자율적인 경쟁이 출발부터 어렵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지방조세체제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財源擴充이나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달성하기가 쉽지않다.

지난 30여년간 계속된 경제개발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상당한 경제기

반을 갖추게 된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과 나머지 낙후된 지역간에는 격차가 심해서<sup>1)</sup> 이미 稅源과 稅收入額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이것이 제정자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 이러한 현재의 경제조건 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시작과 함께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즉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통한 지원이 없는 경우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간 또는 도시간의 貧益貧 富益富현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낙후된 지역의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두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앞서기는 정말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移讓하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미 선진제국들의 예를 보면, 오래전에 거의 완벽하게 지역간 均等化를 달성한 獨逸은 통일을 바탕으로 막강한 경제력으로 무장하여 또다시 유럽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역사는 일천하지만 거대한 국토를 가진 美國도 격차가 심했던 남부와 북부 등 지역간에 불균형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급속하게 해소하여 세계에서 유일의 강대국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완벽에 가까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간의 공정한 競爭(fair competition)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체질이 매우 강하게 단련되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과 연결되어 현재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

1) 지역의 경제력을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의 수도권과 부산-경남-경북 등의 영남권의 경제력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를 강원, 충청, 호남, 제주가 가지고 있는 등의 극심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30년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이들 두 지역에 중앙정부가 이용가능한 자원을 지나치게 편중시켜서 배분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양과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견제,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주된 요인이었음을 알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의 전세계적인 모델로 선망을 받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벨리도 산타클라라 郡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민간부문생산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대부분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은 민간부문보다는 뒤떨어진다. 그것은 민간부문과 같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가 정부조직의 존재목적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확산, 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변화는 정부행정에도 새삼 효율성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보다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효율성은 훨씬 높은 정부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 그러한 정부행정의 효율성변화는 두드러지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전통적인 관료제적 운영, 통제 및 질서유지 지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새롭게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리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기혁신을 해야 하고, 柔軟性과 效率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형태를 권위주의적 지방정부에서 기업가형 지방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공권력집행의 손발 역할에 비중을 두는 공급자 위주였던 지방행정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즉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행정, 생활행정으로 그 역할의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 관내 기업과 주민들

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방정부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식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야만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 3. 地方政府와 地域經濟의 發展戰略

지역발전방법은 앞서 지적한 지방정부역할의 한계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세계화 지방화라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정부에 의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직접적인 誘引策은 기업의 각종 租稅減免政策이 있다. 그밖에 각종 하부구조의 개발, 산업공단의 건설, 도시지역재개발, 토지개발, 모험자본의 육성, 제3섹터를 이용한 지원 등등 많은 방법이 있다. 그 이외에 지방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책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財政諮問이나 자본대출 또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공공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기업이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등도 기업의 생산 비용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 세계시장의 활용, 민관협력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1) 國內의 企業의 유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정부들은 국내외의 우수기업을 자신의 관할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지역은 크게 成長·復興하고 이러한 경쟁에서 뒤진 지역은 쇠퇴하거나 停滯상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전략평가기관인 IMD에 의해 1994년 세계경쟁력 2위로 평가된 싱가포르는 해외기업의 유치가 결정적인 경제발전의 전략이었다고 한다. 인구가 200만에 불과한 소규모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1965년의 독립당시

영국해군의 주둔비가 전체 GNP의 15%를 차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광요 수상의 리더십의 진가가 발휘되어 인적자원 이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작은 도시국가가 해외기업들의 성공적인 유치에 힘입어서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先進富國으로 성장하였다. 우리의 지방정부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비록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찾아보면 여러 대안이 있다. 이들 대안의 공통점은 정부가 기업 경영환경을 변화시켜서 민간기업의 이윤을 전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핵심내용이었다. 즉 지역정부가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준비하되 민간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지역기업의 활동의 도와 주고 국내외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국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 본다면,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의 지도자가 주축이 되는 投資使節團을 구성하여 외국에 파견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의 기업들에게 지역의 각종 여건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그들의 궁금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줌으로써 홍보효과를 얻으며,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활발하였던 지역정치인 차원의 상호방문이나 자매결연사업을 경제협력차원으로 전환해서 상호 경제적인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국의 기업가들을 초청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이 있다. 선진국의 지방 정부에서 외국 우수기업의 유치에 성공한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캔터키州的 메디슨빌(Madisonville)이라는 작은 도시(인구가 16,800명에 불과)는 화란과 캐나다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나라의 재계 지도자를 초청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홍보효과가 대단해서 참여한 기업인 소유의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1990년에 두개의 화란기업의 기업을

유치하여 생산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고, 1993년도에 개최된 대회에서도 참석한 20개회사가 투자를 약속하였다고 한다.

## 2) 海外市場의 개척을 통한 地域發展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世界化(Globalization)는 세계의 모든 나라간에 공간적인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다. 국가간의 인적·물적교류가 급증하여 우리나라가 생산한 제품의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이러한 변화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룩한 사례가 수 없이 많다. 예를 들면, 미국 미시간 주의 사우스필드(Southfield)市는 인구가 불과 73,000명인데, 지역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책을 펼쳤다.

시정부, 시의원,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의 교육기관, 그 외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방편으로 국제 무역자문단을 구성하였다. 먼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제품중 다른나라로 얼마만큼 수출이 되고 있는지, 수출관련 지역기업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훈련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들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시장 정보, 기술자문 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방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있는 中小企業들이 수요면에서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세계시장에 자신들의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생산과 소득, 그리고 고용

면에서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소기업은 세계시장에 접근할만한 능력을 지닌 인적구성면에서나 시장정보획득 등에 관련된 능력면에서 세계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그들 제품의 판매시장을 세계로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조체제를 갖추거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해외시장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수출관련 각종 노하우를 지역기업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관민 합작의 제3섹터 방식으로 지역 특산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창구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世界化나 開放化로 인해서 우리의 안방시장을 외국기업에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우리의 각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지역경제는 세계화라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 3) 民官協同의 強化

많은 지방정부가 제3섹터나 민영화 등 많은 방법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민관합작을 통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이용가능한 자원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지역기업의 발전을 돕거나 지역경제의 活性化를 기할 수 있다. 민관합작을 하는 때에 主導權(Initiative)은 정부가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이 입지할 공단의 조성이나 기업입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공급을 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교육 또는 훈련시키며,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경영의 기법이나 노하우를 제공해서 상호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한다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개발과 구체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정부 구성원들이 그러한 경험이 거의 없고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곤란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조직을 새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조직은 각계의 주민과 이해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기업, 농민, 근로자, 지역주민대표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조직이 된다. 이러한 조직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sup>2)</sup> 정치체제를 가졌던 프랑스에는 近代化委員會(Commissions de Modernisation)<sup>3)</sup>가 있어서 정부정책의 정당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항상 국가안보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여건하에서도 경제를 부흥시킨 이스라엘에는 地域開發機構(Local Development Organization : LDO)가 설립되어서 지역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역개발기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이 원자재를 구입시 일정비율을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기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과실의 상당부분을 지역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민합동의 기구를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이 기구는 기

- 
- 2) 사회당이 집권한 후 1982년에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분권화에 성공하였다.
  - 3) 공무원, 기업대표, 고용주단체, 농민, 노동조합, 기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 구성비는 약간씩 변화가 있음

업이나 정부의 관료조직으로 구성되어서는 곤란하며, 다만 지역의 중요한 경제개발 관련 계획을 입안 또는 승인하고 승인된 계획의 집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주로하는 수평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이 또 하나의 관료조직이 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관료제의 생리상 민간경제활동에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 4. 결 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계화·지방화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정부행정은 統制와 規制라는 공급자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과거보다 보다 큰 권한을 가지게 된 자치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떤 전략으로 競爭力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재정을 튼튼히 해서 전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아직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속적인 소득증가와 도시화 현상에 따르는 경제계의 요구나 희망에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결국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튼튼한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문제는 지방 정부는 물론 주민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지방세제도관련 선결과제는 건전 재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권을 확보하는 문제라 하겠다.<sup>4)</sup> 교부세의 증액을 통한 일반재원의 강화도 추구할 수 있지만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원에 따라 자주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물론 세율도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에 없는 특수재정수요가 존

재하지만 현 지방세제는 전국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特殊性을 반영한 재정수요에 알맞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정부 재원의 주력은 물론 지방세 수입이 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고도성장기간에 불거진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시정한다는 취지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도 많은 資源(교부세)이 배정토록 함으로서 형평성의 제고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지방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할 정도로 세원의 발굴이나 각종 공공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인상경쟁을 하고 있다. 급격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은 지역의 물가인상 압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세원의 발굴로 기억기업의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지역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에 입지를 희망하던 기업도 입주를 늦추거나 포기함으로써 지역경제사정의 악화를 초래해서, 결국 중장기적인 발전에 障礙要因으로 작용하여 세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세계화를 역이용하여 무한히 넓은 수요를 가진 세계시장을 지역에 기반을 가진 기업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렴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만들어 도울 수 있다. 또한 국내외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기간시설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간편화를 하는 등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지방자치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로 주민의 福祉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며, 결국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기여한다.

4) 兪 焄, 「지방 재정의 현실적 과제와 발전 방향」, 지방재정 1991년 가을호, pp.6-14 참조